소비 주춤해도 물가부터 잡는다… 한은, 추가 금리인상 무게

고유가·반도체 호황에 물가 압력
물가 상승 장기화 우려에 선제 대응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2.4% 전망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1.8%로 하향
6개월 후 금리전망 중간값 3.50%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은 누적된 비용 압력에 강한 성장세가 더해져 물가 상승이 길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7·8월 인상과 10월 동결을 거쳐 인상을 재개한 것. 금통위원 5명이 인상에 찬성했고 황건일·이수형 위원은 동결 의견을 냈다.

◆ 고유가에 강한 성장세… 추가 인상 지속

한은이 우려하는 것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압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강한 성장세와 맞물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높아진 비용압력에 성장세 확대의 영향이 더해질 경우 물가 오름세가 보다 오랜 기간 목표수준(2.0%)을 상회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인상은 이미 나타난 물가 압력에 대응하면서 향후 물가 불안도 미리 억제하려는 선제적인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선제적인 대응을 함으로써 우리가 긴축 정도를 좀 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리 대응해 향후 긴축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내년 물가 전망 등을 감안해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억제한다는 포석도 담겼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을 2.9%에서 4.1%로 대폭 상향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도 2.3%에서 2.4%로 소폭 올렸다.

신 총재는 "물가가 성장에 비해서 많이 안 오르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통화정책을 적절히 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강한 성장세에 맞춰 통화정책을 운용해 내년 근원물가 상승률을 2.6% 정도로 관리한다는 설명이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는 시계를 대개 2~3년으로 설명했다. 한은은 2028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1%,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6개월 후 조건부 금리전망의 중간값은 연 3.50%였다. 내년 5월 금리를 대상으로 3.25%에 6개, 3.50%에 8개, 3.75%에 7개의 점이 찍혔다. 위원들이 확률분포를 세 점씩 제시한 21개 중 15개가 현 금리보다 높았다.

다만 금리 경로에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신 총재는 점도표에 대해 "폭이 좀 넓은 것도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 데 기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가 인상의 횟수나 최종 금리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 소비 둔화 인정… 인상 시점 이견

증시 조정이 소비를 제약하는 영향은 전망에 반영했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을 2.1%에서 1.8%로 낮췄다. 주가 하락이 금융여건을 긴축적으로 만들고 가계 지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다만 경제 전체에는 소비뿐 아니라 투자와 수출, 정부 재정·소비도 함께 작용한다고 봤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4%로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기업의 소득이 성과급·배당과 세수를 통한 재정지출 등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고려한 판단이다.

이런 소득의 소비 파급에는 시차가 있다. 세수 증가는 다음 해 예산에 반영되고, 기업이 보유한 자금도 이후 투자와 배당에 쓰인다. 신 총재는 이런 경로를 감안한 내년 4.1% 성장 전망에 대해 "그만큼 총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안정 위험도 남아 있다. 단기자금시장과 신용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이지만, 10월 은행 가계대출은 5조원 늘었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 기대도 여전히 높다는 평가다. 취약차주에는 재정 지원과 재정을 동반한 금융정책, 필요시 채무조정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신 총재는 "추가 인상의 시기 등은 성장과 물가 경로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가계 실질소득' 10분기 만에 감소
고·저소득층 격차는 더 벌어졌다

데이터처 '3분기 가계동향' 조사
3%대 후반 경제성장 전망과 엇갈려
3분기 명목소득 늘었지만 실질 2.1%↓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 작용
하위 20% 소득 줄고 상위 20%는 늘어

가계 실질소득이 10개 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3% 후반에 달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과 대비된다. 다만, 작년 민생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도 작용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6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8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0.8% 늘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1% 줄었다.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은 2024년 1분기(-1.6%) 이후 10개 분기 만에 처음이다. 감소 폭도 2023년 2분기(-8.9%) 이후 13개 분기 만에 가장 컸다.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가계소득과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는 데엔 시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이번 실질소득 감소에는 지난해 일시적인 지원금에 따른 기저효과도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3일 올해 3%대 후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부문 간 성장속도 차이가 양극화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여건의 개선 속도가 경기 개선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소득 원천별로 보면 근로소득은 348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3.6% 증가했다. 임금근로자가 늘고 명절 상여금 등으로 임금이 오른 영향이다. 반면 사업소득은 97만5000원으로 1.4% 줄었다.

이전소득은 84만5000원으로 8.5% 감소했다. 이 가운데 공적이전소득은 지난해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기저효과로 15.4% 줄었다. 가족 등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추석이 지난해 10월에서 올해 9월로 옮겨온 영향 등으로 20.4% 늘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전소득에서 기저효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소득 증가율 자체가 둔화됐다"며 "근로소득은 실질 근로소득도 늘었지만 사업소득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업소득 감소에는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자영업자 증가 폭 둔화, 물가·금리 변동에 따른 사업 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9배로 지난해 같은 분기 5.07배보다 0.32배 포인트(p) 올랐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확대됐다는 뜻이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7만7000원으로 2.7% 감소했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1174만6000원으로 1.4%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전체 가구의 근로소득은 증가했지만 1분위는 24만8000원으로 전년보다 9.2% 줄었다. 반면 5분위는 833만원으로 4.9% 증가해 계층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데이터처는 1분위에서 근로자 가구 비중이 줄고 무직 가구 비중이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분위 근로자 중에는 상용직보다 임시직이 많이 분포하는 특성도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